

특별기고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0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청렴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시기가 도래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해당 기관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2020년도 평가에서 부동산 투기, 갑질 및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청렴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의 부패 경험과 인

식 등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실제 평가 설문지를 살펴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 이외에도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집

과정의 공정성 중요

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청렴문화 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여부 등 결과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소극적 업무처리, 갑질 관행,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청렴을 강조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등 다양한 신규 측정항목을 발굴해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 등 지정 활동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해 기관의 청렴도 향상

청렴의 눈높이

노력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간부직의 솔선수범하는 청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연금인을 위해 올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최고의 실천적 윤리인 양성을 위해 고위직 임직원의 청렴을 강조하는 공직가장 쇄신의지를 표명했다. 고위직 임직원이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 시 엄중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둘째, 늦게 드러난 비위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를 연장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등에 관한 금지행위의 경우 5년 시효를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비위 사항은 10년 시효를 신설했다.

셋째, 조직 긴장감 유지를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10가

지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품위손상 금지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정보유출 및 무단열람을 금지하고, 업무정령 지수 향상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특정인에게 특혜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부당 업무지시 금지 등을 지켜야 할 언행으로 규정된 것이다.

청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

단 한 건의 부패사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제도와 조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속가능한 제도와 기관 운영을 위해서 청렴은 일회성,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청렴(淸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묵인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시한번 새겨본다.

기고



마성간

전남도 친환경관리팀장

2021년 기업경영의 핵심 화두를 선택 하라고 한다면 단연 ESG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기업이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과 사회 문제는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있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추세 속에서 기업의

농업·농촌도 ESG 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재무적 요소였던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도 ESG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농촌도 ESG 동참을 요구받고 있다. 농업·농촌에서 E(환경)는 저탄소 농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자재와 에너지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치)은 6억4,860만톤이다. 2018년 7억2,760만톤 대비 10.9% 감소했다. 그중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1만3,000톤이다. 2018년 21만톤 대비 1.4%가 증가하였다. 이는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업·농촌 분

야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은 19만톤이다. 이는 2020년 21만3,000톤 보다 10.8%가 적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화학연료 사용 농기계, 온실을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저배탄 사료 급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친환경 인증면적이 4만5,928ha로 전국 56%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이외에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시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농촌에서 S(사회)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어민에게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농촌에서 G(지배구조)는 윤리 경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은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양심적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공급해야 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ESG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시대이다. 대부분 펀드가 ESG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 농업·농촌도 ESG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관행에서 ESG 경영으로 바뀌어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지방대 살리기 패러다임 바뀌어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디가 먼저 할 것 없이 대학발전협력단, 상생협력추진단 등을 구축해 정책간담회와 실무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타 지자체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지역대학 전담조직과 산업기술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가야 한다. 이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추세에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서울로 가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당장 고교 현장과 가정에서는 '인

서울' (In Seoul) 대학에 학생과 자녀를 보내는 것이 제1 과제로 세워져 있지 않은가. 더욱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 '큰 사람' 만드는 게 큰 목표처럼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대 위기와 청년 유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요는 이런 서울행 표류를 돌리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교육이라면 우선 지방 명문대를 키워야 한다. 거점국립대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 동부에 하버드대학이 있으면 서부에 스탠퍼드대학이 있듯이 말이다. 전국 국립대 총장과 지자체 단체장들은 앞으로 자주 만나길 촉구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정책과 재정을 지방대학 쪽으로 맞추도록 전략과 계획을 짜야 한다. 교육은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핵심 축이다. 안되면 말고 식으로는 턱도 없다.

'플랫폼기업 산업규제' 시급하다

플랫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생계를 위협받는 10여 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대 투쟁에 나섰다.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고 쿠팡과 플랫폼 대기업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어민에게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농촌에서 S(사회)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비판받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규모를 키우자마자 공정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많다.

카카오편만 아니라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율 높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소상공인들의 모든 활동이 독점화된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면 거래비용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길게 보면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 역시 너무 비대해버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기업들 또한 혁신만 내세우게 아니라,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 어벌식 인수·합병(M&A) 등으로

시민 위한 공영자전거 취지 잊지 말아야

기지사침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게' 사업을 시작했다.

출시 초기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여가 시간과 출퇴근길 등에 이용되는 등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줄어든 이용 건수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랑게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월 6,7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1,256건, 2월 2,289건, 3월 2,578건, 그리고 7월 1,636건으로 떨어졌다. 올해 5월 민간기업 카카오톡이 타랑게가 무사히 광주 시민들의 친화적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에 보급된 카카오톡 타랑게는 1,000여 대 규모다. 이용료는 15분당 1,500원으로, 90분에 1,000원을 지불하는 타랑게에 비해 비싸지만 선호하는 이용객이 많다.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상무지구에 국한되어 이용 반경이 좁은 타랑게에 비해, 카카오톡 타랑게는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고 사용 범위와 이동에 제한이 없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타랑게 만족도



김민빈
사회부 기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설문 결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도 이대로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결정한다면 이번 사업이 주목구구식 행적이었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랑게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사업은 시험 삼아 시작되어선 안 된다.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행정적 유행'처럼 단순히 따라가서도 안 된다.

타 지자체들이 적자 문턱과 민간 업체 영역 확장 등으로 자전거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공영자전거의 초기 취지를 잊지 않길 바란다.

독자광장

어린이·노인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 속 영업제한에 음식점 포장·배달이 급증하면서 도로 곳곳에서는 불법운전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중환자 누비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차선변경을 갑작스럽게 하고 과속, 심지어 역주행까지 일삼으며 운행 중 정지신호가 들어와도 마치 녹색불인 것 마냥 속도조차 줄이지 않은 채 신호위반을 해 기댄 어린이, 노인 등을 위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차도가 아닌 인도 위, 횡단보도 등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중인 배달 오토바이를 보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접촉 사고가

나는 위협천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들은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무법질주를 일삼으며, 특히 어린이·노인 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차 불법행위가 시민 일상에 위협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캠프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헬멧 착용에 대한 집중단속 등 과태료 및 범칙금을 두 배로 부과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여의가 개선돼야 한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이세준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장

안전수칙 준수로 벌쏘임 예방하자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및 성묘 등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벌쏘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7일자로 '벌 쏘임사고 경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올 한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만큼 잦은 비로 인해 예년에 비해 벌들의 생육이 늦어져 늦가을까지 말벌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등 성묘 활동이 많은 9-10월이 벌쏘임 사고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벌쏘임 사고로 총 44명의 안타까운 사망사

고 발생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금하고, 벌초를 하기 안전한 거리에서 말벌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주의한다. 또 흰색과 같은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즉각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상 증상이 발생되면 자가진단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조치 받아야 한다.

/장우철 영암소방서 소방경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department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